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전략



허윤정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고령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해, 의료기관이나 시설 중심 보건·복지 체계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 터전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실현을 위하여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나 시설 같은 분리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communitiy)에서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돌봄(care)서비스를 받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커뮤니티케어(communitiy care)’, ‘지역사회돌봄’, 또는 ‘돌봄서비스’ 등의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체계 자체를 표현할 시에는 ‘커뮤니티케어’로, 우리나라의 정책을 지칭할 때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영국과 일본 등 커뮤니티케어를 먼저 시작한 국가들은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수십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1년 국민보건서비스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NHSCCA)을 제정하여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일본에서는 2005년에 개호보험 제도 개혁으로 시설급여를 축소하고 재가급여를 확대하였다.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을 충분히 학습하고, 실행과제를 정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돌봄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재정적 보상방안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보건의료와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서로 다르게 제도를 발전시켜 온 만큼 더욱 적극적인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전문가, 관련 공공기관들을 포괄하는 국가단위 거버넌스 구축을 주도하는 것처럼, 각 지자체 또한 지역 의료계와 복지시설, 지역사회 대학 등과 협업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13권 제3호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동향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직종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X